

美 디지털자산 Fact Sheet와 시사점

신 석 영 연구원(seokyoung.shin@hanafn.com)

'22년 9월 美 행정부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및 육성안을 담은 포괄적 프레임워크(Fact Sheet)를 발표했다. Fact Sheet는 기존 규제 논의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인프라 연계 등 디지털자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. Fact Sheet는 '23년 입법 예정인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에도 반영 가능성이 높아 향후 국내에서도 ESG 등 다양한 영역과 디지털자산 연계가 부상할 전망이다. 따라서 금융업은 Fact Sheet를 참고, 지급결제 혁신 등 디지털자산의 사업화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.

■ “포괄적 성격의” 디지털자산 정책 기조가 담긴 美 Fact Sheet가 최근 공개('22.09)¹⁾

- 바이든 美 대통령은 주요 부처에 디지털자산 보고서 작성을 명령하였으며('22.03) 제출된 보고서에 기초해 포괄적 프레임워크 Fact Sheet 발표('22.09)
 - Fact Sheet의 정식 명칭은 “Comprehensive Framework for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”으로 제출 완료된 9개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 (대상 보고서 11개)
- Fact Sheet는 총 “7개 주제”로 구성되어 있으며, 기존 규제 내용에 더해 금융접근성, 달러패권, 친환경 등 핵심 이슈에 대한 디지털자산의 활용 가능성을 강조
 - Fact Sheet 주제(7) : ①참여자 보호 ②합리적인 금융서비스와 접근성 증대 ③금융안정성 강화 ④책임 있는 혁신 ⑤글로벌 리더쉽 ⑥불법 금융 근절 ⑦CBDC 활용
 - 美 정부는 “달러 패권 유지”, “FedNow 등 자국 금융인프라 혁신”, “연관 산업 육성”, “탄소중립경제 촉진” 등에 있어 디지털자산의 긍정적 활용 가능성을 강조

■ Fact Sheet는 폭 넓은 디지털자산시장 양성화와 글로벌 산업생태계 선점 계획이 핵심


- 디지털자산시장의 조속한 양성화가 강조되는 가운데, EU에서 육성을 아우르는 양성화 계획이 발표되면서, 미국 역시 양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규제 정책이 대두
 - FBI에 따르면 '21년 디지털자산 사기(Scam)금액은 전년 대비 6배 증가 하는 등 시장 참여자 보호, 불법 자금 조달 방지 같은 시장 양성화 정책 필요성이 확대
 - EU의 관련 법률(MiCA, '22.03)은 민간의 혁신과 시장 양성화 균형 필요성을 명시
- 미국은 자국의 디지털자산 기술과 산업 경쟁력에 자신감을 표하고 있으며, 정부의 산업 지원과 국제 협력으로 국제 산업생태계에서의 주도권 획득 의지를 천명
 - Fact Sheet에 따르면 주요 디지털자산 기업이 미국에 위치하는 등 미국의 관련 혁신과 기술이 부상중이며, OSTP 등 유관 기관을 통한 산업 지원 확대를 천명

[1] FACT SHEET: White House Releases First-Ever Comprehensive Framework for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

■ 미국은 낙후된 자국의 금융인프라 개선, 탄소중립 경제 실현, 달러 패권유지를 위해 디지털 자산 기술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, 이를 위해 CBDC가 핵심 수단이 될 전망

- 미국은 디지털자산이 자국에 미칠 수 있는 “기회와 위험 요인”을 정의한 것으로 판단되며, 기회요인에 대한 지원과 위험요인의 통제도 향후 구체화될 전망
 - 기회요인 : 낙후된 자국 금융인프라 개선, 블록체인 등 관련기술에 대한 미국 경쟁력 확대, 자국 중심의 글로벌 디지털자산 산업 창출, 탄소중립 경제 활용
 - 위험요인 : 거래 조작 등 시장 음성화에 따른 참여자 피해, 테러자금 유출 같은 불법 금융 확대 가능성, 스테이블코인 등 탈중앙 자산의 달러패권 위협 등
- 특히 미국은 중앙집권적 디지털자산인 CBDC(Central Bank Digital Currency) 육성을 통해 디지털자산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고, 위험요인을 통제할 가능성 존재
 - Fact Sheet의 CBDC 내용에 있어 자금결제 효율화, 탄소중립, 금융 포용성, 사이버 위협 및 불법 금융 리스크 최소화 등 장점을 두드러지게 강조

■ 금융업은 ESG, 지급결제 혁신 등 디지털자산의 기회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

- 韓 정부도 미국, EU 등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정책을 주시하며 관련 정책을 구체화 하고 있어 美 Fact Sheet의 주요 내용이 국내 관련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 高
 -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당국은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법률, 정책을 참고하여 정부 안을 마련하고,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계획
- 디지털자산 시장의 양성화에 앞서 금융업은 불법 금융모니터링, 지급결제 효율화, CBDC와의 연계 등 디지털자산을 통한 기회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
 - 신정부 인수위는 '23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, '24년 법안 시행을 발표 

■ 美 Fact Sheet 주요 내용

주제	주요 내용
1. 참여자 보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증권거래위원회(SEC), 상품선물거래위원회(CFTC) 등 규제 기관의 조사/집행 강화 · 소비자금융보호국(CFPB), 연방거래위원회(FTC)는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
2. 합리적 금융서비스 & 접근성 증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급제공자에게 혁신기술 사용을 지원하고 FedNow 등 관련시스템 채택 장려 · 국립과학재단(NSF)은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포용성 확대를 위한 기술과 연구를 지원
3. 금융안정성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재무부는 금융기관 협력을 통해 관련 정보 공유와 분석을 통해 사이버 취약성을 개선 · OECD, 금융안정위원회(FSB) 등 국제기관 협력으로 디지털자산의 금융안정성 영향 식별
4. 책임있는 혁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과학기술정책실(OSTP), 국립과학재단(NSF)은 차세대 암호화 등 기초 연구 및 상용화 추진 · 에너지부(DOE), 환경보호청(EPA)은 디지털자산의 환경 영향을 추적
5. 글로벌 리더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G7, G20, OECD 등 국제 기구 협력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내 미국 영향력 확대 · 미국 중심의 기술표준, 규제 등을 강화하고, 개도국에 관련 기술을 지원
6. 불법 금융 근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은행비밀법(BSA), 무허가자금송금금지법 등을 개정, 디지털자산 공급업체에 적용 · 재무부, 법무부 등은 디지털자산의 불법금융 위험 평가 진행
7. CBDC 활용 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경 간 자금결제 효율화, 친환경 사회, 금융포용성, 불법금융 최소화 등 CBDC의 긍정적 가능성을 언급하고 범부처 간 CBDC 실무 그룹을 운영하여 CBDC의 영향력과 기술 공유

자료 : 미국 행정부(Fact Sheet), 하나금융경영연구소